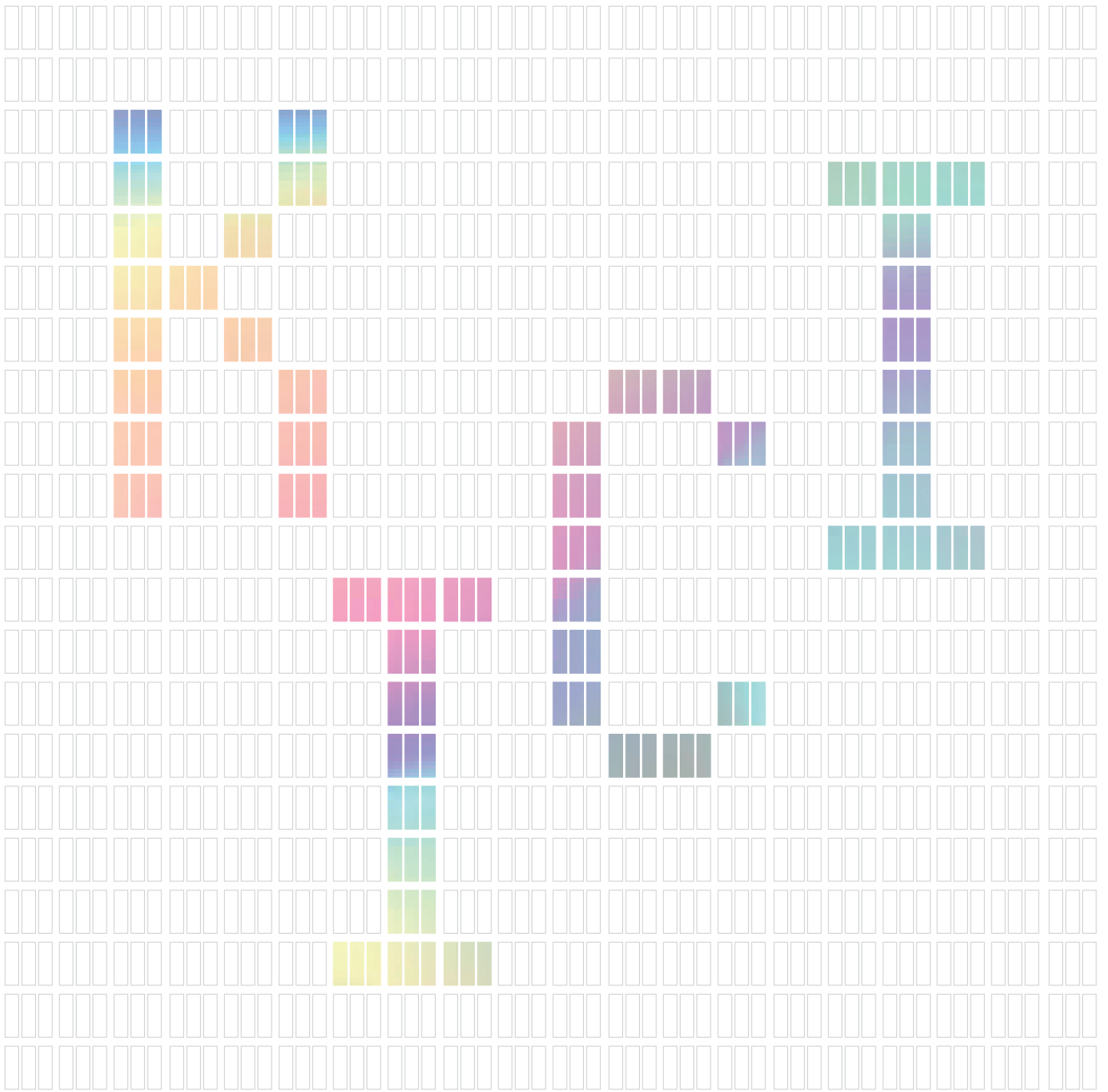




KICI Brief

2026년 3호

KICI Brief

2026년 3호

제1장 KICI Insight	05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06
2.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개발 연구	19
제2장 Issue Brief	33
1.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34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통과	36
3. 버스 공공와이파이 최신 5G 기반 ‘와이파이7’ 도입 추진	39
4.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달성	41
5. AI 공공시스템 구축 활기 정보통신공사 새 먹거리	43
제3장 Stats	45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46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47
제4장 KICI News&Now	49
Event Info	53

KICI Insight

주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추진 배경	06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주요 내용	09
3. 분야별 유지보수 제도 비교 분석	16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시사점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원가관리실 임성진 연구원 / sjim@kici.re.kr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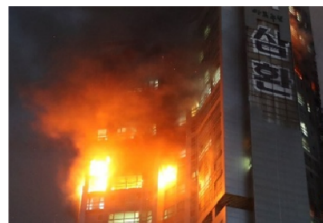
가. 제도 추진 배경

- 반복되는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 AI 대전환(AX) 및 초연결 사회 진입으로, 정보통신설비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필수 전제 조건이며, 정보통신설비 장애 시 안전 위협은 과거의 단순 불편 수준 초월
 - 안전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유지관리 미비 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20. 7. 23.) 발생과정에서 출입통제시설 고장 방치로 3명 사망
 - 울산 33층 아파트 화재('20. 10. 9.) 발생 직후 안내방송 미작동으로 88명 병원 이송
 - 서울 창천동 아파트 화재('25. 8. 17.) 발생 시 대피방송 미흡으로 2명 사망, 13명 부상

[그림-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사례



▶ 초량지하차도 침수('20. 7.23.)



▶ 울산 아파트 화재('20. 10. 9.)



▶ 창천동 아파트 화재('25. 8.17.)

☐ 정보통신설비 운용관리의 비정상화로 인한 대형 참사 발생

- 비상벨 · 방송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관리자가 임의로 전원을 정지하거나 조작하여, 설비의 정상 가동이 저해되어 발생한 참사

- 설비 오작동의 주요 원인으로 소방설비 자체결함 외에 연계 통신선로 등의 노후화*에 기인하는 경우 빈번

* 아파트관리신문, [사설] 걸핏하면 오작동, 노후 화재경보기 대책 시급하다('23. 4. 26.)

- 지하철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출입통제시설 고장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방지
-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23. 7. 15)를 기점으로 지하철도 ICT연계 기반 출입통제설비가 다수 설치되었으며 유지보수 관리 미비 시 반복적인 참사 우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필요성 대두

- 설비의 작동여부에 집중하는 소방점검 이외에 이와 연계되는 통신선로 · 배관 등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필요성 대두
- 반복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강제성을 통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 방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의 표준가이드라인 정립 시급

- 일부 건축물의 경우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
-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월간 점검내용이 단순 증빙 수준인 '이상없음'으로 처리되는 등 실효성 확보 및 점검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아파트관리신문, [칼럼]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시행 연기에 대해 ('24.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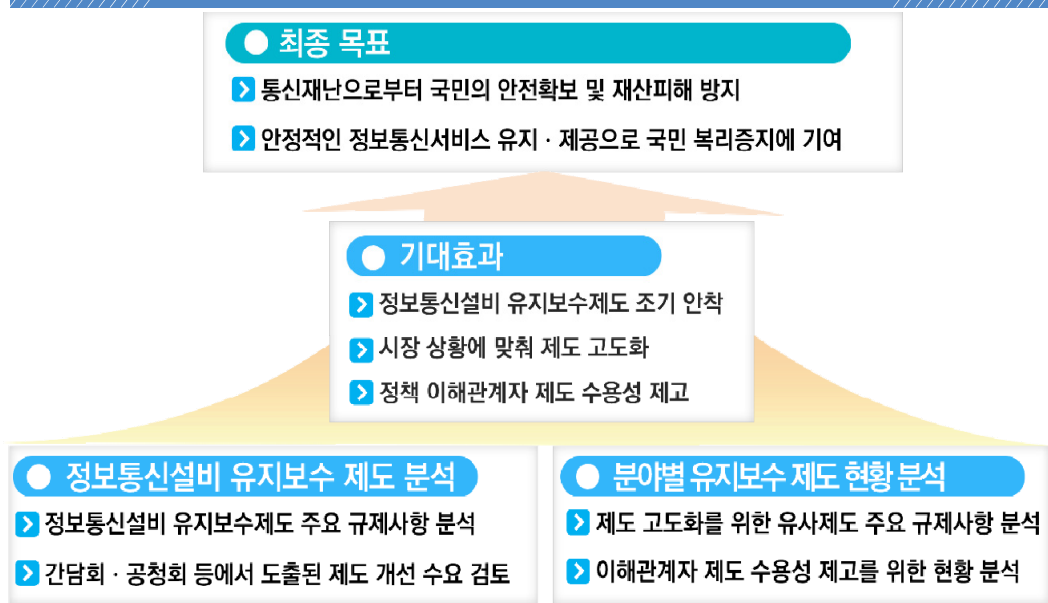
통신재난 발생 시 단순 불편을 넘어 재산 및 인명피해 초래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점검 관행에서 벗어나 실효성있는 유지보수 · 관리를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가진 점검체계와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

나. 제도 현황 및 연구 목적

- ㉮ (제도현황)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된 후, 유지보수제도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수요 수렴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이 공동주택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불시점검 근거마련 등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제도 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나, 통신재난 예방 및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유지가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제도 적용 재검토 필요성 제기

- ㉮ (연구목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안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 타 분야 유사제도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안 발굴
 - 간담회 · 공청회 등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방안 제시

[그림-2] 연구목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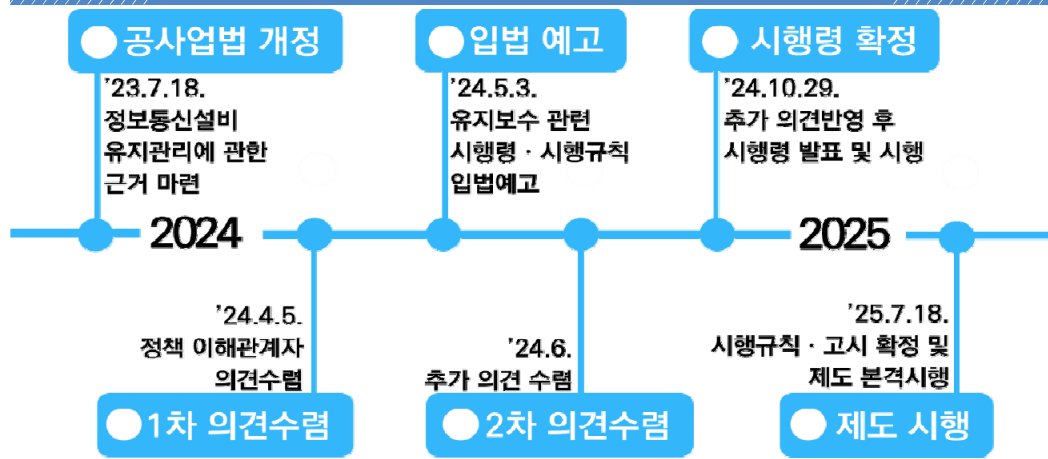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타임라인

- ☐ ('23. 7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 유지보수 · 관리점검 확인, 점검의 위탁 및 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24. 4월) 관련업계 및 지자체담당자 의견 수렴
 - 관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및 점검기록 보존기간 단축 의견 제시
- ☐ ('24. 5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관리 의무대상 일부 완화(공동주택 300세대 이상)하여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 ☐ ('24. 6월) 추가 의견 대응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제도 편입은 관리비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제도 대상제외 촉구
- ☐ ('24. 10월)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 관리점검 대상 및 기준 규정
 -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상, 5년간 점검기록 보존, 관리자 인정교육 및 선임 자격 등
- ☐ ('25. 7월)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기준 고시 확정
 - 건축물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기준 및 점검 세부 사항, 대가기준 등 규정

[그림-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타임라인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 ㉔ (점검기록)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기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 부여
- ㉕ (명문화) 과기부 장관이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을 규정
- ㉖ (관리자선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의무 부여 및 선임·해임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임 시 30일 이내 새로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
- ㉗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미준수, 관리자 미선임 등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표-1]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제도 관련 조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1. 31., 일부개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내용

- ㉔ 2024년 5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관련업계 반발 대응 및 제도 보완을 위해 의견 수렴 후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여 2차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및 시행('24.10.29.)
- ㉔ 점검 대상 및 기록보관 기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 · 관리 체계 확보가 목적
 - (대상범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보존기간) 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
 - (유예기간) 법 시행 후 관리자 선임 및 점검기록 보존의 유예기간* 설정
 - * 3만제곱미터 이상(2025.7.18.), 1만 ~ 3만제곱미터 미만(2026.7.18.), 5천 ~ 1만제곱미터 미만(2027.7.18.)
 - (관리자자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한 정보통신기술자
 - (과태료) 유지보수 · 관리제도 미 준수시 시행령[별표10]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㉔ 1차 행정예고(안) 대비 제도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입법효과 감소 우려
 - 대상건축물 연면적 기준 상향으로 제도 범위 대폭 축소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국가소유의 건축물 등 대상 제외
 - (학교)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로 단서조항이 존재하여 상황에 맞춰 편입가능
 - (국가소유) 연면적(5천제곱미터 이상)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소유 건축물의 경우 제도 적용
 - (공동주택) 통신재난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표사례이나 이해관계자 반발로 인하여 제도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입법 목적을 고려 시 제도 편입 타당성 재검토 필요

[그림-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규제 변경사항

		1차 행정예고(안) (‘24년 5월)	확정공포 (‘24년 10월)
시행령 변경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대상제외
	기록보존	10년	5년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2024년 5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공청회 등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여 의견 수렴 후 일부개정 및 시행 (25.7.18.)
- ㉮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시 반영해야 할 사항 및 자료 제출 요청사항 등 규정
 - 관리 및 점검 계획수립,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내용, 종류 · 항목 · 방법 · 주기, 유지보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선임자격) 관리자 선임 시 연면적에 따라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의무 부여
 -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 5천 이상 ~ 1.5만 미만 초급 기술자 선임 의무 부여
 - (선임기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업무위탁 계약 해지/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선임
 -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준 30일 이내 선임
 - 유지보수 업무 위탁 후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계약 해지/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 (중복선임) 시도 · 연면적 제한 없이 최대 5개 건축물에 대하여 중복선임을 허용
 - (선임신고)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한 및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
 - 시장 · 도지사 · 군수 · 구청장에게 관리자 선임 · 해임 ·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 해임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위탁 시) 등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규제완화) 연면적에 따른 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시도 · 연면적 제한 없이 최대 5개 건축물에 대하여 중복선임을 허용하여 제도 초기 예상되는 현장 인력 수급 불균형 대응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주요 내용

☐ 2024년 5월 시행규칙과 함께 고시 구성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제도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고시 확정 및 시행(25.7.18.)

☐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대상) 통신설비(8개 공종), 방송설비(1개 공종), 정보설비(23개 공종), 기타설비(2개 공종) 등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명시
- (구비서류) 관리주체가 준공도면, 설치현황표를 구비 ·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
- (점검계획수립)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점검 절차, 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사고시)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표에 유지보수 · 관리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연1회 이상 점검 · 기록해야 함을 명시
- (위탁업무) 관리주체와 위탁받은자의 역할 및 대가 산정 기준 마련
- (보고의무) 지자체에서 요청 시 정보통신설비 점검 결과 제출 의무 부여

[표-2]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표 1])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랙, 오픈랙), 동단자함(캐비닛랙), 중간단자함, 충전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트레이/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	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자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AM 변조기, 신호증폭기,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메인앰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자동안내방송시스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	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Rack Cabine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유닛(Interface Unit), 검침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	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팬틸트(Pan/Tilt), 오토리프트, 투광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단지망, 세대망,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	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	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센서, CO2센서, 조도센서 등), 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 controller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 경보중계장치, 경보수집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	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핵심 내용

규제 사항	세부내용	
연면적(㎡)	선임기준	관리자 선임 특례기간
6만 이상	특급	~ 2025.7.18. (연면적 3만 이상)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 2025.7.18. (연면적 3만 이상)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	~ 2026.7.18. (연면적 1.5만 ~ 3만)
5천 이상 ~ 1.5만 미만	초급	~ 2026.7.18. (연면적 1만 ~ 1.5만)
		~ 2027.7.18. (연면적 5천 ~ 1만)
관리자 선임	관리자 선임 관련 세부 사항	
선임 자격	유지보수 · 관리기준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정보통신기술자	
중복 선임	5개 건축물 중복선임 허용	
선임 기한	선임 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선임 (완공일 / 용도변경 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 위탁 후 계약해지 · 종료일)	
신고 서류	선임 · 해임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서식10, 11]), 재직증명서, 업무 위탁 계약서, 기술자 경력수첩, 경력확인서	
신고 기한	선임일 · 해임일 · 변경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대가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표3] 참고	
관리 · 성능점검	점검관련 세부 사항	
구비서류	준공도면, 설치현황표	
계획수립	점검 대상 현황표(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지1]), 점검절차, 산업재해방지대책, 긴급상황 메뉴얼,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재발방지 대책(사고시) 등 포함	
관리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표에 기록(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지2])	
성능점검	연1회 이상 점검 및 점검표에 기록(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지3])	
결과제출	지자체 요청 시	

3. 분야별 유지보수제도 비교 분석

☐ 유지보수 ·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인 법률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의 목적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6개 법령 선정

* 국민의 안전확보 및 재산피해 방지, 복리증진에 기여 등

- 시설물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기계설비법, 승강기법, 철도건설법 선정
- 과태료 중과기준, 점검기록 보관기준, 유지보수제도 대상 범위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 (대상)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 (과태료중과) 점검 미이행 · 결과 미통보 · 기간 지연 · 반복위반 등
- (점검분류)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성능평가 · 긴급안전점검 등
- (점검주기)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안전등급에 따라 연 2 ~ 3회
- (기록관리)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반기별 1회 이상 국토부장관에게 제출(10년 보관)

☐ 「전기안전관리법」

- (대상) 전기설비 대상으로 전압 · 계약방식 · 규모에 따라 분류
- (과태료중과) 미존재
- (점검분류) 정기점검, 자체점검 등
- (점검주기) 자체점검의 경우 월 1회 점검 간접 의무화
- (기록관리) 전기안전종합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입력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4년 보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대상) 특정대상소방물을 대상으로 규모 · 중요도 ·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류
- (과태료중과) 점검 수행 후 미보고 · 미게시 등 후속조치 미이행 특화
- (점검분류) 작동점검 · 종합점검 각 연1회 점검
- (점검주기) 소방민원센터에 점검 내용 입력
- (기록관리)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소방서장에게 제출(2년 보관)

㉔ 「기계설비법」

-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용도 및 공공성에 따라 분류
- (과태료종과) 거짓 · 은폐 · 조작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관리자 선임 관련 종과항목 다수
- (점검분류) 성능점검
-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 (기록관리) 자체 보관 및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10년 보관)

㉕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승강기
- (과태료종과) 전자시스템 미입력시 과태료 종과에 대한 항목 존재
- (점검분류) 자체점검 및 자체검사 등
- (점검주기) 정기검사는 격년, 자체점검은 매월 진행
- (기록관리)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나 별도 제출 · 통보 · 보관의무 미존재

㉖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법)」

- (대상) 5년 주기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름
- (과태료종과) 점검 하도급 미신고에 대한 종과사항 존재
- (점검분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점검
- (점검주기) 정기점검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그림-5] 분야별 유지보수제도 주요 특징

	종 과 기 준	점 검 분 류	점 검 결 과
시설물	· 위험표시 · 점검결과 게시 등 알람 사항 존재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10년 보관)
전기	· 종과 기준 미존재	· 정기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 등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4년 보관)
소방	· 점검 수행 후 후속조치 관련 사항 세분화	· 작동점검, 종합점검, 공동주택 세대점검 등	·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소방서장에게 제출 (2년 보관)
기계	· 관리자 선임 및 거짓 · 은폐 · 조작 관련 사항	· 성능점검	· 자체 보관 및 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 (10년 보관)
승강기	· 점검 후 전자시스템 미입력시 종과	· 자체점검, 정기검사 등	·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나 별도의 제출 · 통보의무 미존재
철도	· 점검 하도급 관련사항 존재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점검	·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시설 내규에 따라 보관)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시사점

☐ 정보통신설비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필수조건이며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인명피해) 설비 장애 시 과거 불편 수준을 넘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초래
- (관리필요) 반복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강제성을 통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방증
- (가이드라인) 증빙을 위한 점검을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 시급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현황

- (연면적) 연면적에 따른 선임기준을 분류하고, 특례기간을 부여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완화
- (관리자선임) 선임자격, 중복선임 제한, 선임 신고관련 사항 규정 및 대가기준 제시
- (관리·성능점검) 제도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세부사항 명시

☐ 과태료 중과 기준 마련 및 과태료 항목 추가 발굴 필요

- (제도현황) 과태료 기준은 존재하나, 반복위반 등에 대한 중과기준 부재
- (타법비교) 6개 분석대상 법령 중 1개 법령을 제외한 모든 법령에서 과태료 중과기준 운영
- (개선방향) 타법사례를 검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중과기준 필요 항목 발굴 필요

☐ 점검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제도현황) 주기적인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점검 이행여부 확인불가
- (타법비교) 분석 대상 법령 중 1개 법령을 제외한 모든 법령에서 주기적인 점검 제출 의무 부여
- (개선방향) 제출의무 부여가 타당하나, 현 제도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결과 보관기간 상향 필요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제도 편입 타당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 방안 필요

- (제도현황) 공동주택을 제도 범위에서 제외
- (타법비교) 분석 대상 법령 중 별도로 공동주택 등을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례 미존재
- (개선방향)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한 우선도입 대상 검토 필요

KICI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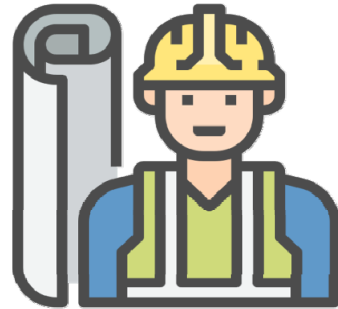
주제2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개발 연구

1. 개요	20
2. 목표 및 추진전략	23
3. 주요 내용 및 성과물	26
4. 결론 및 시사점	31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개발 연구

산업정책실 김현덕 책임연구원, 심상균 연구원 / force80@kici.re.kr, sksim@kici.re.kr



1. 개요

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입체 모델링 객체에 속성 정보를 부여하여 건설 전 생애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 BIM은 CAD 기반의 2D 정보를 3D 기반의 입체 모델로 전환하고, 3D 가상 공간에서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생애주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지원

☑ 속성 정보: 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 설비가 가진 고유 기능 및 특성

☑ 건설 생애주기: 계획 → 설계 → 조달 → 시공 → 유지관리

- 제작된 라이브러리들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건축 및 설비 구현이 가능

* 라이브러리란 시설물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형상 및 속성 정보를 보유한 단위 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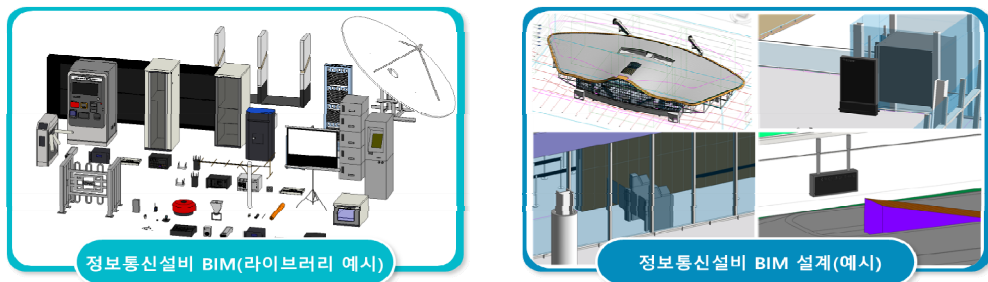
나. 정보통신설비 BIM

- 정보통신설비 BIM(ICEBIM*)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건물, 도로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Digital-Twin으로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써 IC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 ICEBIM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기존 BIM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정보통신설비 특성이 담긴 속성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술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타 디지털 트윈 분야와의 연계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 진행
- 향후 AI, 드론, IoT 등과의 기술 접목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모니터링 및 주체별 협업 체계 지원

[그림-1]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및 설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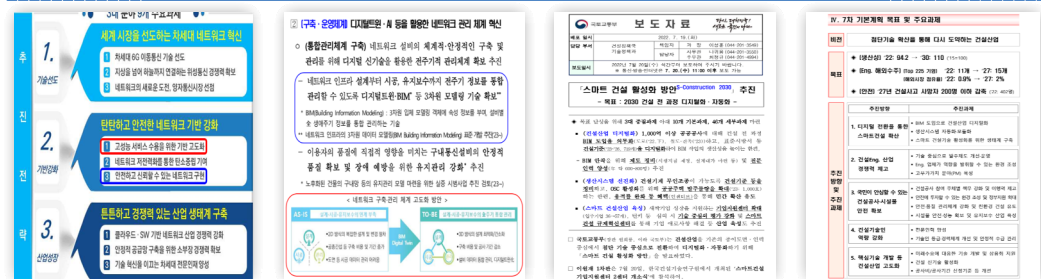


다. 국내 · 외 BIM 도입 현황

□ 국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Network 2030전략” 정책 세부 추진 과제로 네트워크 인프라(ICT) 고도화를 위한 BIM 포함. 네트워크 설비의 체계적 · 안정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정책을 통해 2030년도까지 공공부문 BIM 단계별 도입 추진

[그림-2] BIM 관련 정책 (국토부, 과기부)



[그림-3] 국내 BIM 도입 현황



-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Water, 조달청 등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신규 발주 사업에 BIM 설계 적용 의무화
- 국내·외 「정보통신설비 BIM 표준」에 대한 연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수행 중
- 발주 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설계업체(통신,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에서도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및 관련 활용기술에 대한 활용 및 기술 협력 요청

국외

- BIM 도입은 선도국 → 후발국 순서로 점진적으로 확산 및 의무화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등 다수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그림-4] 국외 BIM 도입 현황



라.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통합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설비는 스마트 건축 및 ICT 융합 확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기존 2D 기반 설계와 분절된 정보관리 방식은 설비 간 연계성과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BIM 적용이 확대되면서, 타 공종과의 협업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BIM 도입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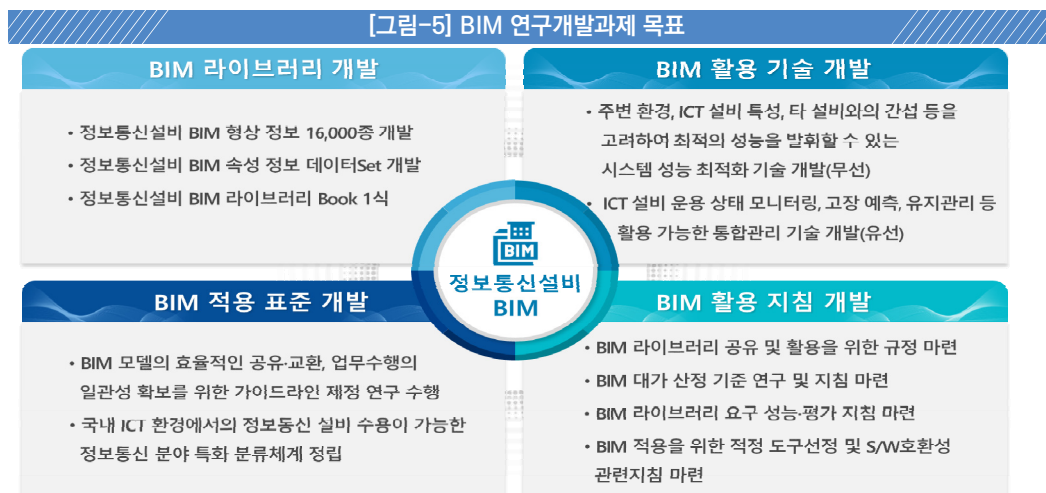
[표-1] 정보통신설비 BIM 도입 전/후 비교

구분	AS-IS	TO-BE
설계	2D 설계(간섭 및 중첩 발생) - 설계 오류 발생(자재 수량 산출 등) - 복잡한 설계 변경 절차	3D 설계(간섭 및 중첩 해결-Digital Twin 구현) - 최적화 설계(명확한 수량 산출) - 설계 변경 간소화 및 비용 감소
시공	- 재시공 발생, 공종 간 간섭(공사 기간 연장) - 시공 비용 증가 - 공정 파악 및 안전관리 수립 복잡	- 재시공 및 공종 간 간섭 제거(공사 기간 감소) - 시공 비용 절감 - 단계별 공정 파악 및 효율적 안전관리
유지보수	- 도면/매뉴얼 등 시공 데이터 관리 불가 - 사후 유지보수	- 데이터 연계 및 통합 데이터 관리 -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전 유지보수 - 유지보수 범위 확대 및 능동적 대응을 통한 비용 절감

2. 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연구개발과제 최종 목표

- ☞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차세대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혁신을 위한 BIM 라이브러리(3차원 데이터 모델링·Digital-Twin) 표준 개발



나. 사업 추진 체계

- 정보통신공사업의 핵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학·연이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추진 체계 구성
- 과제의 핵심인 1세부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해 위탁연구개발 기관을 산·학·연 체계로 구성
- 연구, 교육, 실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라이브러리 개발 추진
-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협업 및 보완 체계 마련

[그림-6]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개발 추진 체계



다.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세스

㉔ 4대 추진 전략

- BIM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개발 프로세스 확립, 연차별 연구범위 선정, 성과관리 중심으로 한 4대 추진전략 수립
-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의 완성도와 활용성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BIM 활용 기반 마련

[그림-7] 연구개발 추진 전략



㉔ 체계적인 라이브러리 개발 프로세스 확립

- 세부적인 흐름의 개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개발 추진
-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보완 체계 마련

[그림-8] 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단계	추진 내용
표준화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공종분류 체계 및 속성 정보 개발
라이브러리 개발	개발된 표준화 방향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라이브러리 개발(형상 및 속성정보 포함)
* 개발 검증	개발된 라이브러리의 표준화 및 호환성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추진
활용 기술 개발	정보통신설비에 특화된 BIM 라이브러리 활용을 위한 S/W개발
지침 마련	표준화, 라이브러리 개발 및 검증, S/W활용을 위한 지침 마련

* 개발 검증: 개발된 라이브러리의 표준화 이행 정도 및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 테스트 진행

나. 정보통신설비 BIM 모델 적용 표준

☞ 전체 공종에 대한 BIM 분류체계 구축,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BIM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TTA 표준 제정

○ 정보통신설비 BIM 분류체계 구축을 통한 설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그림-11] 정보통신설비 BIM 분류체계

대분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중분류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배관 설비공사	교환 설비공사	전송 설비공사	무선·방송설비	네트워크 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 설비공사	항공·해상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전원 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01	통신선로설비	케이블덕 및 트레이 설비	교환설비	광전송 장치	송·수신기 설비	네트워크설비	지능형 교통시스템	항공통신설비	정보통신전원공급 설비	철도통신선로설비
02	통신전보대 설비	덕트설비		분배 및 다중화 장치	중계기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감시·보안설비	해상통신설비	접지설비	전송설비
03	통신케이블 설비	구내통신배관설비			안테나 설비	스마트그리드설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선박 통신설비	전력 전철유도 방지 설비	열차무선시스템
04		단자함설비			철탑 설비	정보안내설비	스마트 융합설비		서지·낙뢰 방지설비	역무자동화설비
05		박스 설비			급전선 및 도파관 설비	원격자동감침·제어 설비			갑음진자파설비	역무용통신설비
06		배관부대설비			위성 송·수신설비	기상정보설비			기타전원설비	여객안내설비
07					이동통신설비					승강장 안전지원 시스템
08					기타 무선설비					철도신호설비
09					방송 및 음향영상 설비					전원설비
10					방송공동송신설비					건축용통신설비
11					종합유선방송설비					

○ 정보통신설비 BIM 가이드라인(설계자, 시공자, 유지관리자) 수립을 통한 설계 · 시공 · 운영 전 단계 활용 기준 및 절차 제시

○ 정보통신설비 BIM의 TTA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산업 표준 정립

[그림-12] 정보통신설비 BIM 가이드라인 및 TTA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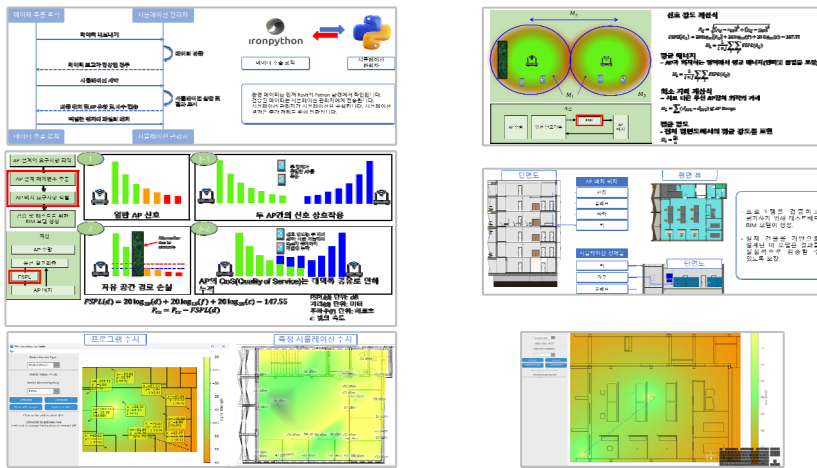


다. 정보통신설비 BIM 활용 기술

㉔ BIM 기반 무선 인터넷 혼신 및 음영지역 분석 모듈

- BIM 기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무선 인터넷 혼신 및 음영지역을 사전에 분석·예측하고 최적의 통신 품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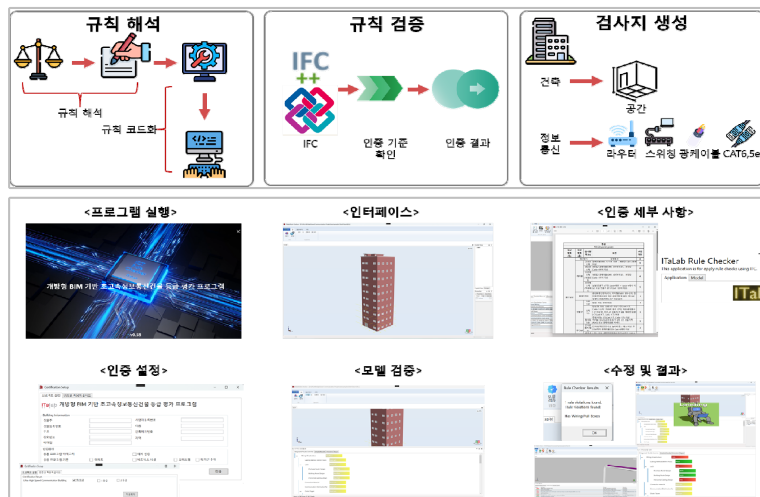
[그림-13] BIM 기반 무선 인터넷 혼신 및 음영지역 분석



㉔ 개방형 BIM 기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 평가 모듈

- 설계 단계에서 IFC 데이터를 열어 관련 인증·법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자동 점검하여, 사전 설계 적합성 확보 및 검토 시간 단축을 지원

[그림-14] BIM 기반 인증 법규 검증 모듈



라. 정보통신설비 BIM 작성 · 활용 · 인증 지침, 대가산정 가이드

㉔ 작성 · 활용 · 인증 지침 & 설계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정보통신설비 분야에 특화된 BIM 라이브러리 지침을 마련하여 작성 · 활용 · 인증 체계를 정립하고,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활용 기반 마련. 정보통신설비 BIM 설계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설계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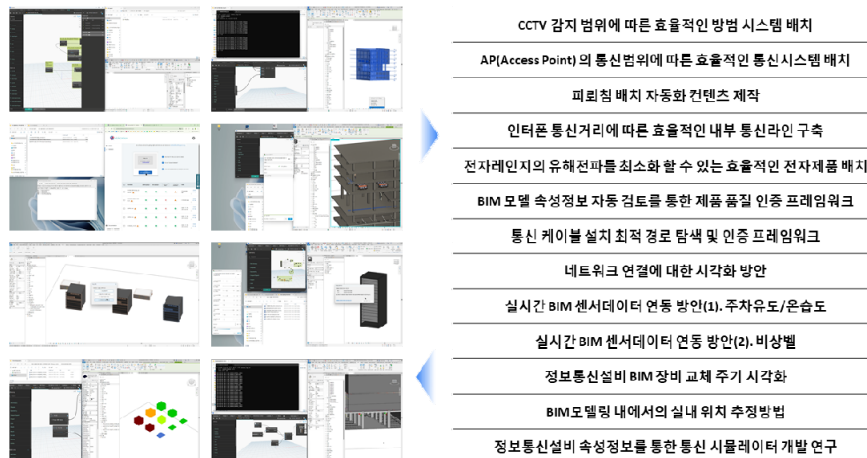
[그림-15] BIM 라이브러리 작성·활용·인증 지침 및 설계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마. 관련 테스트 모델 개발

- 라이브러리 테스트 모델 13종 개발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BIM 기반 배치 최적화, 속성정보 검증, 센서 데이터 연계 등 실증형 콘텐츠 구현
- BIM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활용성 향상 방안 도출

[그림-16] BIM 기반 실증형 콘텐츠 구현 및 개발



바. 특허 및 저작권 등록 현황

▷ 정보통신설비 BIM 데이터 활용 관련 특허 및 응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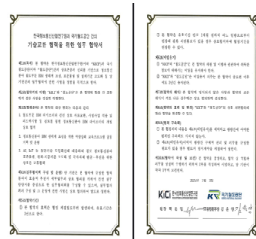
[그림-17] BIM 관련 특허 및 저작권 등록



사. 국내외 업무협약(MOU)

▷ 대상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 국가철도공단(KR) / 2025.07.03

- 정보통신분야 철도부문 BIM 생태계 조성,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고도화 등 양 기관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 몽골 건설기술자협회(MACE) / 2024.09.13

- 국내 정보통신설비 BIM 라이브러리 표준개발 사업 해외 홍보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함



4. 결론 및 시사점

가. 결론

☐ 정보통신설비 BIM 표준 구축

- 본 연구는 정보통신설비 분야의 BIM 표준 부재 문제를 해소하며,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BIM 라이브러리 및 표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

☐ BIM 라이브러리 및 산업 적용 체계 마련

- 약 16,000여 종의 BIM 라이브러리와 IFC 기반 개방형 표준 적용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실무 활용성을 확보하였으며, BIM 가이드라인 · 인증지침 · 대가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업 현장 적용 기반을 체계화함

☐ BIM 활용기술 및 확장 가능성 확보

- BIM 기반 분석 · 자동검토 · 센서데이터 연계 등 실증형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 건설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함

나. 시사점

☐ 건설 · ICT 융합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보통신설비 BIM 표준화는 건설 · ICT 융합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설계 생산성 향상, 시공 품질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 신기술 연계 및 신규 시장 진출

- BIM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AI · IoT ·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관련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 등 신규 시장 창출 기반 마련 가능

☐ BIM 산업 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향후 공공 발주 및 실증사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표준 고도화 및 산 · 학 · 연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국내 BIM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Issue Brief

-
- | | |
|--|----|
| 1.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34 |
|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6 |
| 3. 버스 공공와이파이 최신 5G 기반
'와이파이7' 도입 추진 | 39 |
| 4.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달성 | 41 |
| 5. AI 공공시스템 구축 활기 정보통신공사
새 먹거리 | 43 |
-

Issue Brief

1.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개정안은 ①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②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③공사 계약시 상호보증 의무화, ④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
- ①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제8조)
 - 감리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현행법 상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어 중복 신고 또는 허위 배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향후,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

- ②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제14조의3, 제66조, 제69조)
 - 신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는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 신규 공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향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기대
- ③ 공사 계약시 상호보증 의무화(제26조의2, 제78조)
 -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그간, 민간 공사는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계약 이행 보증이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상호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④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제35조, 제35조의2)
 - 공사업자는 시공 관리 부실로 인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 공공 분야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세 중소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0조 원 규모, 13,000여 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중소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Issue Brief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시설 특례 규정,
비수도권 전력 계통 영향평가 면제 ”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정과제 20번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관련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개월 경과 기간 뒤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2. 추진 경과

- 국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짐
-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 법안이 '25년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

3. 법안 주요 내용

- <① 체계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제2조)하고 실태조사를 추진(제7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 진출 촉진(제1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16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제17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조속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 [1. 인허가 일괄처리(제18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소요 시간이 길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되어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
 - [2. 비수도권 전력 계통 영향평가 면제(제19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
 - [3.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제21조)]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기준 완화되어 불필요한 투자 부담 완화

Issue Brief

4. 향후 계획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27년 2월 시행 예정
 -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마련할 예정
 - 과기정통부와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의 적기(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

[표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요약

목 표	내 용
산업 육성	• AIDC 법적 정의 확립 • 종합 시책 및 실태조사 실시 •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규제 완화	• 인허가 '원스톱' 및 '타임아웃제' 도입 •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비수도권 AIDC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 직접 공급 허용 • 건축 및 시설 의무 완화
세제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함
- ❖ 아울러,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기후부와의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7.

3.

버스 공공와이파이 최신 5G 기반 '와이파이7' 도입 추진

“ 모두의 시를 위해 이동중에도 빠르고 안정적인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 과기정통부-NIA,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7 도입 추진
 - 과기정통부와 NIA는 국민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중에도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에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7 (Wi-Fi 7)'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특히, 버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이용량이 2025년 기준 75,777TB로 2023년 38,728TB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확대됨
- 전국 시내버스 2.9만여 대를 대상으로 기존 장비를 5G 백 홀 기반의 와이파이(Wi-Fi 7) 무선공유기(AP)로 교체하여 차세대 공공와이파이환경 구축 추진 예정
 - 버스(AP)당 월 데이터를 기존 200GB에서 300GB로 확대하고, 약정 기준 초과 시에도 품질 보장을 통해 최소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기준을 강화함

Issue Brief

- 기존 1~3차로 나눠 운영되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통합 체계로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관리와 운영 효율성 개선
- 최신 와이파이(Wi-Fi 7) 도입을 통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와이파이 7(Wi-Fi 7)은 기존 와이파이(Wi-Fi 6/6E) 대비 전송속도와 응답속도가 크게 향상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임
 - 최대 320MHz 대역폭 지원으로 기존 대비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멀티링크 동작(MLO, Multi-Link Operation) 기술을 통해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이동 중에도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함
 - 출퇴근 시간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동영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임

[그림 1]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안내문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버스 공공와이파이에 최신 5G 기반 '와이파이7' 도입 본격 추진, 2026. 5. 28.

4.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달성

“ 정부, 통신사업자-재활용사 등과 함께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핵심광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



- 폐통신장비 핵심광물 국내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과기정통부, 기후부는 통신사업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와 그 안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KC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3년 기준 13,600톤 규모의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가 배출되고 있으며 약 1,800억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생활 폐가전 대비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다고 밝힘
- 국·내외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동향과 한계
 - 유럽연합(EU)의 CRMA(핵심원자재법),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Net Zero 2050' 등 탄소중립과 자원안보를 위해 폐통신장비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되고 있으나, 국제 시세 및 수요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종 유통 경로 추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으로 국내 순환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과기정통부, 기후부, 통신사업자 등은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 필요성에 공감하여 실무 협의회 진행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함

Issue Brief

●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과기정통부-기후부-KCA-한국환경공단은 2027년 6월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 흐름조사, 폐통신장비 자원순환 지표 발굴, 폐통신장비 자원순환 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
- 특히, 국내 재활용률 등 자원순환 공동지표를 발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통신사업자가 차기 재활용업체 조달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데 활용
- 폐통신장비의 핵심광물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7년 과기정통부 39억, 기후부 20억원을 들여 폐장비 내 핵심광물 분리 자동화 기술 개발·실증 지원(과기정통부), 희토류·광물 내 주기 관리시스템 구축(공동),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기후부) 등 공동 사업 추진 방안 검토

[표 1]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통신장비 분류 및 처리·유통 흐름 조사기준 마련 - 폐통신장비 자원순환 촉진 방안 마련(지표 발굴 등) - 폐통신장비 전주기 자원순환 협의체 구성·운영
통신사업자	- 폐기물 발생현황 자료 및 유통정보 제공 협력 - 폐통신장비 자원순환 지표 발굴 및 입찰조건 개선 노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폐통신장비 상세 분류 및 핵심광물 DB 구축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처리실적 검증, 재활용 제품 흐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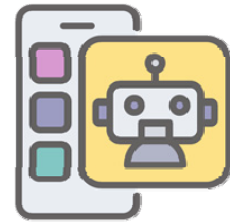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통신망의 발달로 기지국, 서버 등 통신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함량이 높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음을 밝힘

[출처]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기후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재활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6. 6. 11.

5.

AI 공공시스템 구축 활기, 정보통신공사 새 먹거리

“ 정부·지자체, AI 접목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행정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 ”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AI 공공시스템 구축 동향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홍수예보시스템’과 ‘AI 스마트 정수장’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 및 수자원 관리 혁신을 추진중이며, ’24년부터 올해까지 ‘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운영에 122억원을 배정하였고, ‘AI 스마트 정수장’ 2차 고도화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함
- 국토교통부는 ‘AI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을 통해 AI를 활용한 얼굴 인식과 셀피 카메라 촬영에 중점을 두어 교통안전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23년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개정하여 RIMS를 최초로 구축한데 이어 ’24년 2단계, ’25년 3단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경찰청 면허 DB와 직접 연계해 무중단·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최적화 단계에 진입함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AI 도입 가속화와 관제 혁신

- 서울 강남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AI 기반 부정주차 관리시스템’과 ‘AI 여객 흐름 관리시스템’을 구축·도입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 및 공항 혼잡도 선제적 조정에 나서고 있음
- 강남구는 주차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안내·계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60여 대의 IoT 센서 연동을 통해 공항의 혼잡 가능성을 시간대·공정별로 예측하여 여객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음

Issue Brief

[표 1] 부처·기관별 주요 AI 공공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내 용
기후에너지환경부	- 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 (122억 원) - AI 스마트 정수장 2차 고도화 추진 (80억 원)
국토교통부	AI 기반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 무충단·안정적 서비스 구현 (20.8억 원)
서울 강남구	AI 기반 부정주차 관리시스템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통합 관제
인천국제공항공사	IoT 센서 연동 AI 여객 흐름 관리시스템 기반 올해 제2터미널 구축 예정

● 설계·시공기준 제정·보급 지속 추진 필요

- AI 기반 공공시스템 구축은 ICT를 기존 시공에 접목하는 'ICT 융합' 영역으로 공사업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시공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 기준은 표준설계설명서와 표준공법, 설계기준 등을 포함하며, 발주기관 및 설계·시공자가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T)는 정보통신공사법 제6조(기술수준의 준수 등)에 근거하여 최근 스마트 융합 공종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전통 공종 정비를 병행하여 제정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AI 공공사업 확대 등 시장의 ICT 융합 트렌드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급 영역 확보와 안정적인 시공 품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원의 선제적인 기준 제정 및 고도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출처] 정보통신신문, AI 공공시스템 구축 활기... 정보통신공사 새 먹거리 주목, 2026. 6. 2.



Stats

-
- | | |
|------------------------|----|
|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46 |
|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 47 |
-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정보통신공사비지수(국가통계 승인번호 제412001호)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지표,
발표 시점과 예정가격 산정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 반영, 계약 이후의
표준시장단가 계약금액 조정 등에 사용됨



》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추이

※ '26년 5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26년 6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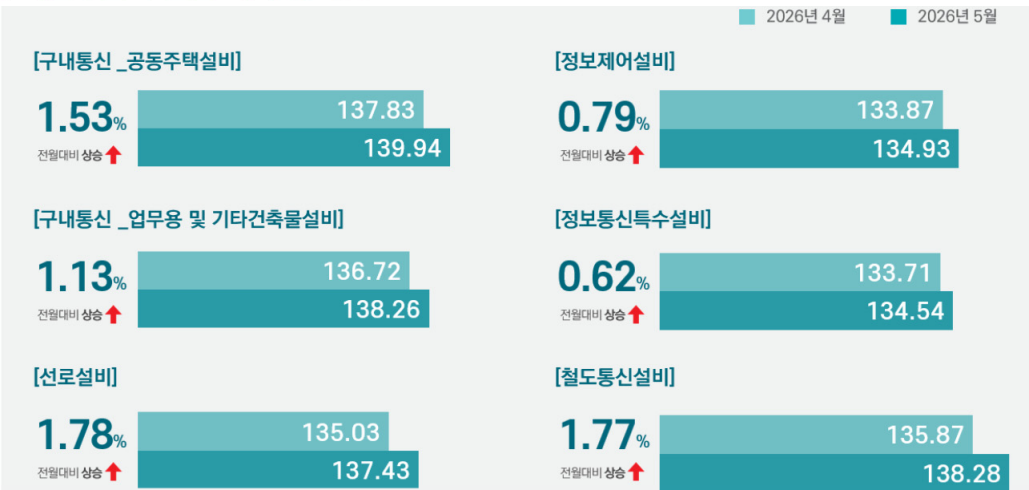


'26년 5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 136.00 (2020년=100)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품목 중 1차 금속
제품의 가격이 1.4%,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가격이
1.6% 상승하며 정보통신공사비지수가 상승하였음

0.99% 상승 ↑ 전월 대비
8.04%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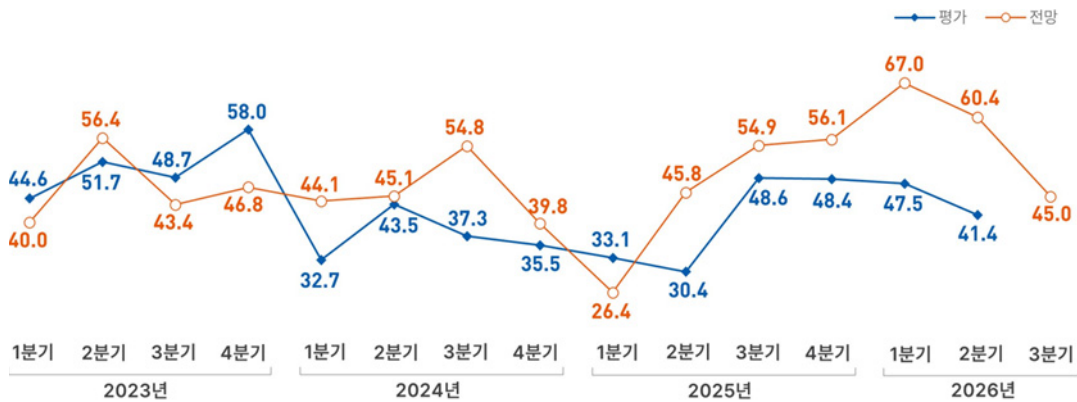
》 기본부문의 전월 대비 등락률



2.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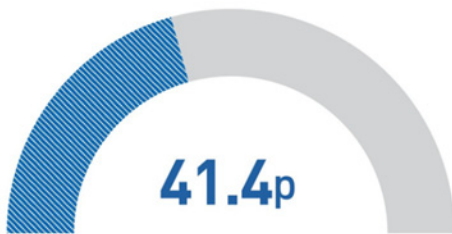
경기실사지수(BSI)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
100 이상이면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음



경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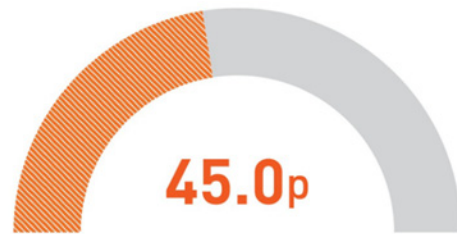
1분기 평가 대비 6.1p 하락 ▼



[2026년2분기평가]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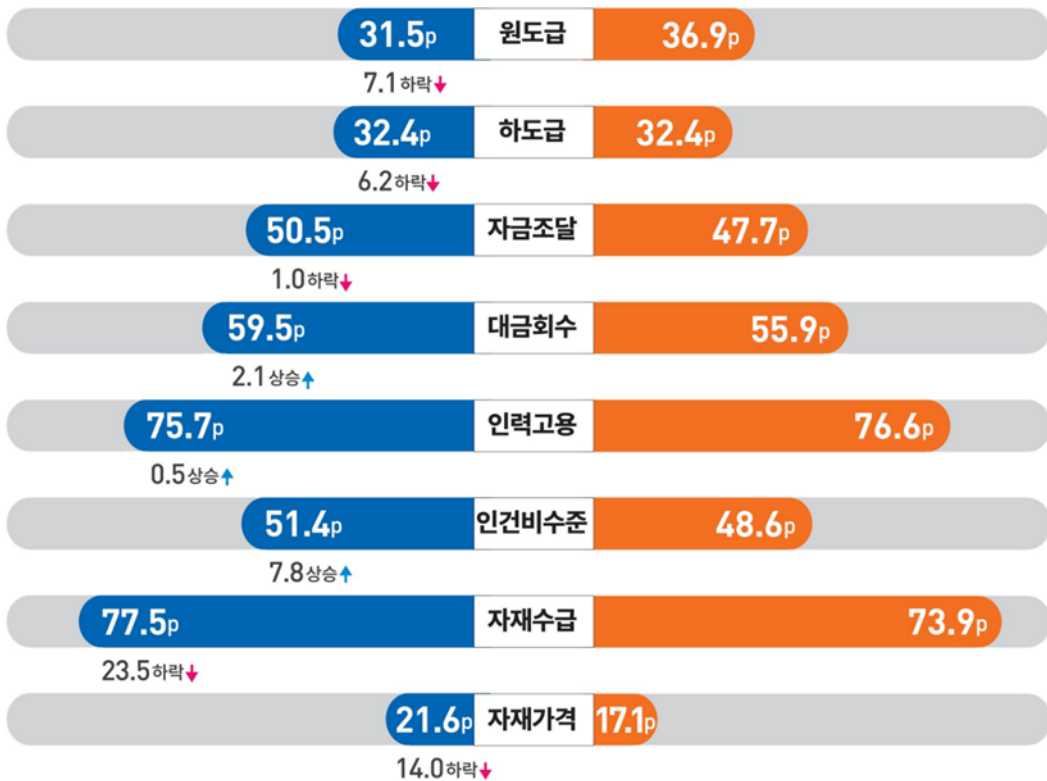
2분기 평가 대비 3.6p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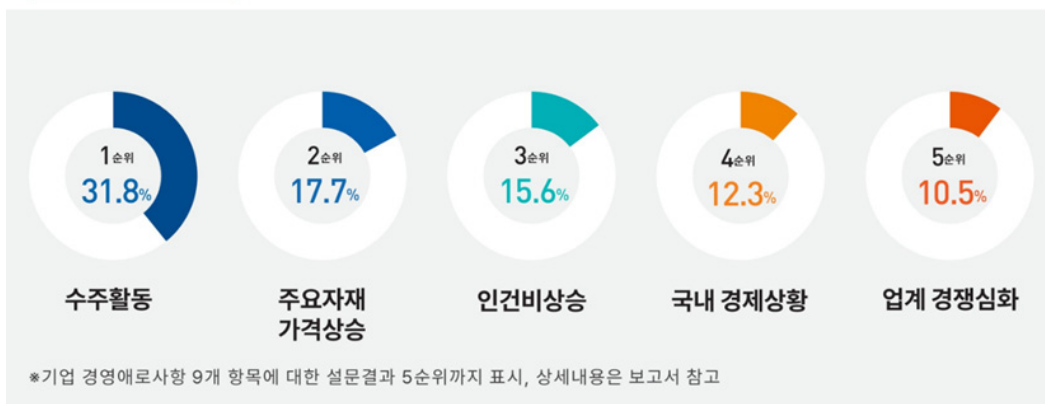
[2026년3분기전망]

Stats

———— [2026년2분기평가] ———— ———— [2026년3분기전망] ————



경영애로사항





2026년 연구원 춘계 체육행사

일시 2026. 4. 10.

장소 수원화성 동장대 일대



연구원 이사장 외 임 직원 화합을 위한 수원화성 둘레길 트레킹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검토 2차 회의 개최 (SKT)

일시 2026. 4. 7.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전문가 검토 회의



2026년도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실무 교육

일시 2026. 4. 17.

장소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강의실



전파방송통신 전문인력양성 교육 - 신규자 전파관리 기초과정
2026년도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실무교육 및 점검내용 교육



「디지털 안전관리 현장점검 위탁용역」 착수보고

일시 2026. 4. 27.

장소 중앙전파관리소 회의실



「디지털 안전관리 현장점검 위탁용역」 중앙전파관리소와 과업
추진 방향 공유 및 점검 업무 세부실행계획 점검



5 통신시설 안전점검 옥외설비 기술기준 대상 검증방법 검토 연구반 회의

일시 2026. 5. 7.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통신시설 안전점검 옥외설비(통신용철탑) 기술기준 적용대상 및
검증방안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연구반 회의 진행



6 중요통신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일시 2026. 5. 14.

장소 LGU+ IDC가산센터 회의실



안전점검 현장 종사자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합동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



7 2026년도 제1차 철도신호설비 표준품셈 제정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일시 2026. 5. 13.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철도신호 전문가 5인이 참석하여 철도신호 공종 분류 체계
검토 등 철도신호 표준품셈 제정 논의



8 2026년 제1차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2026. 5. 15.

장소 한국프레스클럽 프레젠테이션



2026년도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준 제·개정 추진방향 및 제정
현황 보고

9



2026년 제1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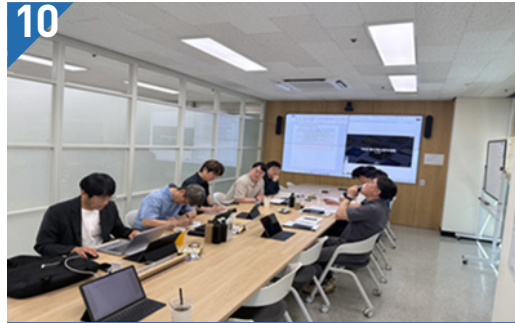
일시 2026. 5. 29.

장소 한국프레스클럽 프레스센터



2026년도 설계기준 개발 추진계획 보고·세부공종 적정성
검토 및 논의

10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검토 2차 회의 개최(삼성전자)

일시 2026. 6. 5.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전문가 검토 회의

11



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 기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2026. 6. 9.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정부·공공기관, 공사업계 등 13인의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26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검토·심의

12



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 기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2026. 6. 17.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정부·공공기관, 공사업계 등 14인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26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검토·심의



13 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검토 2차 회의 개최(네이버)

일시 2026. 6. 18.

장소 디지털안전본부 회의실



사업자 사전 제출 자료 전문가 검토 회의



14 2026년 제2차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실무위원회 개최

일시 2026. 7. 2.

장소 한국프레스클럽 프레스센터



철도통신·신호설비 설계기준 적용체계 검토(안) 논의

Event Info



AI 안전보건박람회

2026. 7. 6.(월) ~ 9.(목)

컨텍스 제2전시장

<https://www.safetyshow.co.kr>

- 입장료: 사전 및 현장등록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7월 5일(일)까지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 솔루션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모여 최신 기술 동향 발표

주최 : 안전보건공단

KOREA BUILD WEEK

2026. 8. 5.(수) ~ 8.(토)

코엑스 B홀

<https://nextcon.kr/>

- 입장료: 일반 20,000원(사전등록시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8월 4일(화)까지



스마트 건설, 건설 AI·로보틱스, 건설 자동화, 스마트 안전,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건설산업의 혁신 기술을 조명하는 건설 융복합 사례 전시 및 발표

주최 :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한국피지컬시협회



AI SUMMIT SEOUL & EXPO

2026. 8. 19.(수) ~ 21.(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B홀

<https://www.aisummit.co.kr/>

- 입장료: 일반 20,000원(사전등록시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7월 31일(금)까지



AI 컨퍼런스, AI 최신 기술 트렌드 등 산업별 적용사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혁신을 조망하는 AI 산업 대표 플랫폼으로, 국내외 AI 테크 리더 기업들과 솔루션 발표

주최 : 코엑스, DMK 글로벌, 한국무역협회





2026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2026. 8. 26.(수) ~ 28.(금)

킨텍스 제1전시장

<https://worldcitytechexpo.com/>

- 입장료: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8월 26일(수) 17:00까지



기후위기대응형 통합관제 및 재난 대응,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 시티 등 도시 솔루션 비즈니스 플랫폼 전시

주최: 경기도, 킨텍스

제8회 AI정부 혁신 콘퍼런스

2026. 8. 27.(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층

<https://www.sek.co.kr/2026/aig>

- 입장료: 무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8월 26일(수) 17:00까지



AI·정보화 사업 해결 사례, 민간 혁신 기업과 최신 공공 특화 솔루션 소개, 정책·기술 등 AI 기반 행정 혁신 방안 제안

주최: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K-ICT WEEK in BUSAN 2026

2026. 9. 9.(수) ~ 11.(금)

벡스코 제1전시장

<https://ictweek.kr/>

- 입장료: 추후 발표 예정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추후 발표 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네트워킹, AI 혁신 전문가 협업 등 AI, CLOUD, SW 등 ICT 관련 전문가가 집결하는 글로벌 미래선도기술 전시

주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